

정치성향과 재난 안전 체제개선을 위한 집합적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예시로

강 민 재¹⁾ 최 훈 석^{*}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재난 안전 체제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두 편의 연구로 시민들의 체제개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방지를 위한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정치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과거 유사 사건(세월호 참사)과 관련된 체제 정당화 기억(체제 결함을 사면하거나 회피하는 내용의 기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예비 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집단기억'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의 집단기억 속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억이 실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주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개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았고, 이 관계를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인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정치성향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집단기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집단기억이 체제 변화를 위한 집합적 행동 참여 의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발현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집단기억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 장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재난, 정치성향, 집단기억, 체제정당화, 체제개선 행동의도

1)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수료

^{*} 교신저자 :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연재해와 달리 사회적 재난은 인재(人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 사회에 사회적 재난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재난을 유발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이재열, 2022). 재난에 관한 연구 문헌에 따르면, 특정인의 부주의나 실수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회적 재난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체제적 결함이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다(박상은, 2023). 따라서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으로 드러난 사회체제의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양기근, 2004). 특히,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부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년),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재난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심리학과 사회문제의 연결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심리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한덕웅, 2003).

재난 연구자들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난 대응을 주도하는 데 수반되는 한계에 주목하여 재난 발생 이후 체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시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이영희, 2014). 사회적 재난 발생 이후 정부가 정책변화를 통해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 체제가 지닌 결함을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정성에 위협이 초래된다(Tierney, 2007). 이러한 이유로 재난 발생 이후 정부가 체제적 결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Hood, 2002). 이와 관련하여, 한승주(2018)는 2006년

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 6건과 관련된 정부의 사후 제도 개선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대처가 재난 사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재난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선하기보다는 다분히 피상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고 이후 특정 문제 영역에만 국한된 규정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방식(예: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이후 건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에 ‘지붕’을 포함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위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책임 전가를 통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주도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본질적인 체제개선을 이루도록 하는 시민들의 체제개선 요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김창진, 홍성우, 2017; 이영희, 2014).

이처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유사 재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참여와 체제개선 요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난 이후 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시민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물로 인해 체제개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체제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 Jost & Banaji, 1994; Jost & van der Toorn, 2012)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 체제정당화 이론을 검증한 선행 연구에서 ‘체제’란 사회 집단 간 관계, 정부, 제도와 같이 현 사회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대상들을 포괄한다(Jost & van der Toorn, 2012). 사람들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에는 특정 이념이나 관습 또는 권위를 지지하는 것, 체제의 문제나 결점 회피 및 최소화, 그리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관념 형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회 내 질서, 그리고 정부나 제도와 같은 체제 자체를 정당화하고 방어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 사람들이 체제를 정당화하도록 동기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정당화를 통해 인식론적 욕구(예: 불확실성 회피, 질서, 구조에 대한 욕구), 실존적 욕구(예: 안전 및 안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관계 욕구(예: 소속 욕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기존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체제의 안정성에 문제가 초래되고, 이는 안정성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욕구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체제개선 요구가 필요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현 체제를 정당화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다(예: Napier et al., 2006). 이 맥락에서 보면,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예방하고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난 이후 사람들의 체제개선 행동을 가로막는 심리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체제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지만 체제정당화 동기의 수준은 개인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다(Jost & Hunyady, 2005). 특히, 정치적 보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 간에는 정적 상관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즉,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위협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정치적 보수성향이 강하고(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현 체

제를 유지함으로써 익숙한 상황을 유지하고 사회 변화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가 높다(Jost & Hunyady, 2005). 이는 정치적 보수성향이 체제에 저항하는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한 일련의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예: Badaan et al., 2018; Feygina et al., 2010; Jost et al., 2017).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선행 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과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위협을 동반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해당 사건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과거 유사 사건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음(Ghilani et al., 2017; Hilton & Liu, 2017; Liu & Hilton, 2005)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억에 관한 사회인지 문헌을 토대로 현재의 신념이나 동기에 따라 기억이 달라지고(Kunda, 1990; Sanitioso et al., 1990),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후속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Bobowik et al., 2014; Ionescu et al., 2021; Jeong & Ray Vollhardt, 2021). 이 전제 하에, 사회적 재난 맥락에서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를 확인하고,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세월호 참사)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면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기억을 체제정당화 기억(system-justifying memory)으로 명명하고, 정치성향과 최근 유사 재난 사건(이태원 참사)과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

Jost 등(2003)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정치성향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변화에 대한 태도'와 '불평등에 대한 수용'이다. 특히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과는 반대로 불확실성과 상황적 위협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 안정과 관습, 계층 위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평등을 옹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선행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이 체제 변화와 관련된 태도 및 행동과 부적 관계에 있음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예: Badaan et al., 2018; Feygina et al., 2010; Hennes et al., 2012; 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예를 들어, Hennes 등(2012)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미국의 기존 경제 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월가 점령 시위)에 반대하고,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운동(티파티 운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은 기후 변화와 같이 인간이 초래한 재앙적 결과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과도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 즉, 기후 문제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경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제정당화 동기가 높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된다(Feygina et al., 2010). 이 주장과 일관되게, Häkkinen과 Akrami (2014)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가 강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Feygina 등의 연구(2010)에 따르면,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가 과장되었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관한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현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친환경 행동의도가 낮았다. 즉,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후 변화와 같이 불확실하고 기존 사회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현상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의도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재난이 주로 기존 체제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한승주, 2018) 기후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반응에서 유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즉, 보수적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현 체제를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동기가 강하므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체제를 옹호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재난 발생 이후 재난과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보수정권 하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행동의도와 보수적 정치성향 간에 부적 관계를 추론하였다.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기억은 개인과 사회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산물이다(Halbwachs, 1992). 사회학을 비롯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집단기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심리학에서 집단기억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Hirst et al., 2018; Liu et al., 2022). 집단기억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한 사

회가 경험한 역사적 사건 중 ‘어떤 사건’이 집단기억으로 남아 유지되는지, 그리고 특정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와 사회구조적 요인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Choi et al., 2023; Li et al., 2021; Lim & Leong, 2021; Sahdra & Ross, 2007). 일례로,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대를 살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 사건에 관한 기억 내용이나 구체성이 다르다(Muller et al., 2016, 2018). 또한, 사회 개발 수준이나 국가의 문화적 특징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범세계적 사건을 각기 다르게 기억하기도 한다(Bobowik et al., 2014).

개인의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에 관한 앞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이에 따라 현 체제를 정당화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Badaan et al., 2018; Feygina et al., 2010; Jost et al., 2017). 소위 ‘뜨거운 인지’에 관한 일련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신념과 동기는 세상에 관한 개인의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친다(Kunda, 1990). 이는 한 사회가 경험한 특정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 역시 그 사람의 신념과 동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치적 사안에 관한 구체적 신념과 동기적 지향성을 내포하는 개인의 정치성향 역시 사회적 사건에 관한 집단기억 내용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회적 사건에 관하여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억의 내용은 체제 비판적 기억보다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치성향이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의 내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Hennessey와 동료들의 연구(2021)에 따르면, 미국인 참가자들에게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와 관련된 장면들을 기억하도록 했을 때,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Donald Trump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은 그 외 후보들에게 투표한 참가자들에 비해 시위의 부정적인 단면들을 더 많이 기억했고 그 시위가 극단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Muller 등(2016)은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 시절에 대한 아르헨티나 참가자들의 기억 내용을 분석하여 진보성향 응답자들은 군부독재 시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의 내용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보수성향 응답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우세함을 관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uller 등(2016)은 군부독재 시절이 아르헨티나의 보수진영에 불리한 역사이기 때문에 보수성향 참가자들이 군부독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정치성향과 집단기억의 관계를 시사하는 선행 연구들을 고려하면, 사회적 재난 사건과 같이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도 그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Napier et al., 2006) 맥락에서, 체제의 결함을 시사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체제정당화를 촉진하는 기억을 ‘체제정당화 기억’으로 명명하고,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체제정당화 기억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람들이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일

관되게 관찰되었다(예: Hennes et al., 2016; Proudfoot et al., 2015). 이 방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체제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믿고 체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방편으로 체제의 결함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회피하거나 체제가 지닌 단점을 합리화한다(Proudfoot et al., 2015). 이처럼 정치성향과 사회적 재난에 관한 기억의 내용 간 관련성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자신이 의지하는 체제를 정당화하고 긍정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보수정권 하에서 발생했던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과 관련하여 체제의 결함을 사면(exoneration)하는 기억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기억 간의 관계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의 기억은 이후 유사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판단과 태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기억은 사람들이 현재 신념과 동기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기능을 하는 한편(Kunda, 1990; Sanitioso et al., 1990),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유도한다(Smith & Semin, 2004). 집단기억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사회적 사건에 관한 기억에서도 자신이 속해있거나 지지하는 체제를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

억이 우세하며, 이러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이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판단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obowik et al., 2014; Ghilani et al., 2017; Hilton & Liu, 2017; Ionescu et al., 2021; Jeong & Ray Vollhardt, 2021; Liu & Hilton, 2005). 일례로 Bobowik 등(2014)이 36개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을 ‘정당했던’ 또는 ‘필요했던’ 전쟁이라고 기억할수록 미래에 유사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가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도가 높았다.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을 ‘사회적 재앙’이라고 기억할수록 자신의 국가를 위해 싸울 의도가 낮았다. 이는 사람들이 특정 사회적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참조점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과거 유사 사건에 관한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현재나 미래 사건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인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이후 발생한 유사한 재난 사건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식으로 작용하며,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우세할수록 이태원 참사의 맥락에서 체제의 결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도가 낮을 것으로 추론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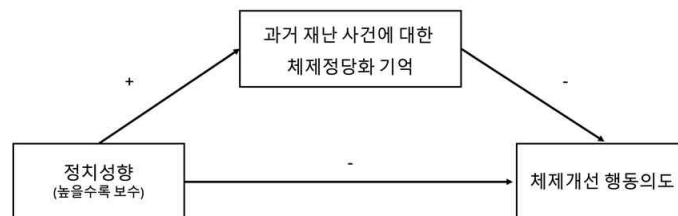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가설 1: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다.

가설 2: 정치성향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 관계를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매개한다.

예비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본 연구에 앞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체제정당화 기억이 실제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체제정당화 기억 분류절차의 유용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참가자들의 기억을 수집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총 304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재난으로,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실패와 체제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회적 재난이다(이영희, 2014).

방 법

연구대상

4년제 대학 재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남성 7명, 여성 20명, 평균연령 19.37세), 참가자들은 연구 참가점수를 받는 조건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예비 연구와 본 연구는 대학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IRB 승인 번호: SKKU 2023-04-048).

도구 및 절차

세월호 참사 회상 질문지

개방형 문항을 활용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참가자의 기억을 수집하였다.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개방형으로 물어 구체적인 집단기억 내용을 탐색하는 방식은 선행 연구에서 유용성이 확인된 절차이다(예: Muller et al., 2016). 이 절차에 따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을 수집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네 가지 단서를 제시하여 각 단면에 해당하는 기억을 수집하였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행되었던 [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예: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 잔해 및 유해 수습, 책임 소재 파악 등)”, “세월호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반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치권(정당)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참가자들이 응답한 기억 내용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을 확인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를 사면하는 내용의 기억과 체제 실패와 관련된 기억을 분류하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당국의 조사보고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체제의 실패를 시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할 때, 참가자들의 기억에서 체제실패에 관한 내용이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체제에 해당하는 주체는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민 구조 의무가 있는 대통령,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의 응답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는 만큼 체제에 해당하는 주체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체제사면 기억 범주는 체제와 관련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사면하는 내용의 기억으로 정의하였으며, 체제를 사면하고자 하는 의도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유관 선행 문헌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체제가 기능적으로 작동했다는 묘사나 체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묘사(예: Proudfoot et al., 2015),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묘사(예: Hennes et al., 2016; Proudfoot et al., 2015),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부정적 묘사(예: Hennessey et al., 2021)로 구성되었다. 이 기준에 따라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사면 기억 범주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3.52%였다. 불일치 항목들은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체제실패 기억 범주는 체제의 과실이나 실패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기억으로(예: Proudfoot et al., 2015),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및 사고 수습 등의 대응 과정에서 체제에 의해 발생한 과실이나 실패 사례들로 구성되었다.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실패 기억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3.52%였다. 불일치 항목들은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결과 및 논의

예비 연구에서 조사된 기억 응답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작업 결과는 표 1과 같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된 기억 문항에 걸쳐 참가자 27명이 제공한 응답은 총 108개였다. 이 가운데 19개(17.59%)가 체제 사면 기억을 포함한 응답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중 체제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 체제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내용, 사건 심각성을 축소하거나 사건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내용,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이 체제를 사면하는 내용의 기억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총 108개 기억 응답 중 52개(48.15%)가 체제실패 기억을 포함한 응답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가 잘못하였거나 실패한 사례에 대한 묘사 등이 체제실패를 반영하는 기억으로 분류되었다.

예비 연구 결과는 과거 사회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체제를 사면하거나 체제의 실패를 반영하는 내용의 기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참사 대응 및 수습 과정, 피해자 및 유가족, 정치권의 대응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참가자들의 기억에서 당시 체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거나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모습, 체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적 상황 요인을 강조하는 내용,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과한 책임을 졌다는 내용,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묘사한 내용 등 체제의 잘못이나 책임을 사면하고 보호하려는 기억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상대

표 1.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결과

범주명	기억 내용 예시	빈도(%)
1. 체제사면 기억	체제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	19(17.59)
	• “구조대원이 출동해 구조에 힘썼으나 당시 비까지 내리면서 구조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주었고 합동 애도 시설도 마련되었다.”	
	체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묘사	
2. 체제실패 기억	•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것과 학생 구조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52(48.15)
	• “안전하게 모두 생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월호 선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피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뒤늦게 온 구조대원들도 승객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의 심각성이 과장됐다는 묘사	
	•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과한 보상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총	체제 비판 세력에 대한 부정적 묘사	108(100)
	• “많은 정치인들이 노란 배지를 패용하기 시작했고, 해당 사건을 이용해 정치 갈등에 이용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 “침몰 사고 직후 구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대통령은 자신의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총	•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이 제대로 안 되었다.”	

주. N = 27

로 참가자들의 기억 응답 내용에서 체제의 과실이나 실패를 반영하는 기억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본 연구는 정치성향이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개로 이후 유사 재난 사건에 대한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기억으로

는 예비 연구와 동일하게 세월호 참사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유사 재난 사건으로는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이태원 참사에 관한 세부 내용은 김지혜, 2023 참조).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으로, 세월호 참사와 유사하게 정부 책임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한 사회에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초점을 둔 본 연구 목적상 연구에 적합한

사건이라는 판단하에 이태원 참사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참가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만 19세 ~ 만 69세, 평균연령 43.32세, 표준편차 13.79) 200명이었으며, 성별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유층표집을 구성하여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23년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사전동의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사업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참가 수당을 지급받았다.

도구 및 절차

정치성향

참가자들의 정치성향은 구체적인 정치적 사안에 관한 참가자의 태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 방식은 다수의 국내외 선행 연구(류재성, 2019; 윤성이, 2006; 장승진, 2020; 한정훈, 2016; Everett, 2013; Huber, 1989; Jost & Thompson, 2000; Sidanius, 1978; Wilson & Patterson, 1968)에서 사용된 바 있다. 참가자들에게 제시할 정치적 사안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관 선행 연구(류재성, 2019; 윤성이, 2006; 장승진, 2020; 한정훈, 2016; Everett, 2013; Huber, 1989; Jost & Thompson, 2000; Sidanius, 1978; Wilson & Patterson, 1968)에서 활용한 정치적 사안들을 선별하고 한국의 최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 첨예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3개 사안(차별금지법 반대, 원자력 발전소 증설, 법정 근로시간 확대)을 추가하여 예비목록을 구성하였다. 이 목록에 포함된 정치적 사안들 가운데 최근 3개월간(2023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내 뉴스 기사에 언급된 빈도를 기준으로 사회(예: “사형제 폐지”, “원자로 발전소 증설”, 등), 경제(예: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재벌 기업 규제”, 등), 안보(예: “대북 지원 확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 영역별 상위 6개 사안을 포함하는 총 18문항을 최종 선정했다. 뉴스 기사 언급 빈도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가자들은 18개 정치적 사안에 각각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1점 =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지지한다)에 응답하였다. 총 18개 정치적 사안 중 진보 의제를 반영하는 문항들은 역점수화했으며, 전체 18개 문항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여 점수가 클수록 보수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총 18개 문항 가운데 “표현의 자유 보장”, “차별금지법 반대”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가 개선됨을 확인하여 해당 두 문항을 제외한 총 16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 = .88$).

과거 재난 사건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

기억 응답 문항. 예비 연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개방형 문항으로 과거 재난 사건(세월호 참사)과 관련된 참가자들의 기억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예비 연구의 기억문항에 더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또 다른 대응 주체인 ‘국민’에 관한 문항을 다섯 번째 문항으로 추가하였다(예: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들

의 반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기억 내용 단위화 및 오류 응답 제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5개 문항에 대해 참가자 200명이 제공한 응답은 총 1,000개였다. 참가자들이 제공한 기억 내용을 의미별로 구분하고 오류 응답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단계에 걸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복수의 문장으로 구성된 응답 내용의 경우 각각 하나의 의미를 반영하는 단위들로 구분하였으며, 한 단위는 하나의 주제, 상태, 또는 행위가 포함된 단일 사건으로 구성되도록 단위화하였다(참조: Hirst & Manier, 1996).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단위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5%였다. 불일치 응답은 평정자 간 논의를 거쳐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기억 자료에 대한 단위화 결과, 1,000개의 응답에서 총 1,863개 단위가 식별되었다.

단위화 작업에 이어 오류 응답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위화 작업에서 식별한 총 1,863개 기억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자 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 오류를 분류해냈다. 참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한 경우(예: “노란 근조 리본을 달고 다녔던 내가 떠오른다”), 문항에 제시된 기억 단서(예: 구조 작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 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반응, 정치권(정당)의 대응, 국민들의 반응)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한 경우(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치권(정당)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 응답. “초반 대처에 실패하여 뒤늦은 구조 작업을 실시했다”), 기억으로 보기 어려운 응답을 한 경우(예: “죽음 앞에서 적절한 보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응답 오류를 분류하였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3.62%였다. 분류가 두 평정자 간에 불일치한 자료는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오류 응답 제거 작업을 통해 총 1,863개 단위의 29.63%에 해당하는 552개 단위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311개 단위가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집단 기억으로 분류되었다.

체제정당화 기억 범주화. 참가자들이 응답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집단기억 1,311개 단위 중 체제사면 기억에 대한 범주화를 예비 연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사면 기억 범주화 작업을 실시했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7.82%였고 불일치 자료는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분류 결과, 총 1,311개 기억 단위 중 131개(9.99%) 단위가 체제사면 기억으로 확인되었다(예: “해수 흐름이 빨라 구조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부는 구조 작업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상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

또한 예비 연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총 1,311개 단위에 대해 체제실패 기억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두 명의 평정자가 독립적으로 체제실패 기억 범주화 작업을 실시했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는 97.97%였고 평정자 간 논의를 통해 분류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였다. 총 1,311개 기억 단위 중 328개(25.02%) 단위가 체제실패 기억으로 분류되었다(예: “초기 구조 작업 실패”, “해경이 구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돈이나 바라고 활동하는 파렴치한

으로 몰아가려고 했다”,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예비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참가자들은 체제사면 기억과 체제실패 기억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체제사면 기억과 체제실패 기억의 비율을 산출하여 그 값이 클수록 체제정당화 기억이 우세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체제개선 정책 지지 및 체제개선 행동의도

재난 대응과 관련한 시민 주도 참여행동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정부 활동이나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적 활동’과,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민 행동에 동참하는 ‘집단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창진, 홍성우, 2017). 먼저 개인 수준에서 체제개선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체제개선 정책을 지지하는 진술문에 참가자가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소관 부처 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과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독립 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인 추모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의 4개 문항(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으로 측정했으며, 자료분석에서는 네 문항 평균값을 사용했다(Cronbach's $\alpha = .91$).

체제개선 행동의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참가자들의 집단적 시민 행동 참여 의도를 물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체제개선 요구 행동

의도를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이해 ‘사회 안전망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이 조직된다고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집단행동에 동참할 의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3개 문항에 응답하였다. “개인 SNS(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겠다”, “개인 SNS(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에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겠다”,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정부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거리 시위에 참여하겠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7점 = 매우 그렇다). 분석에는 세 문항 평균값을 사용했다(Cronbach's $\alpha = .93$).

통제변수

선행 연구에서 체제정당화는 우익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사회지배경향성(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과 같은 사회적 신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st & Hunyady, 2005). 우익권위주의는 관습주의(conventionalism),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 권위주의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을 반영하는 신념이며(Altemeyer, 1998), 사회지배경향성은 집단 간 불평등과 위계에 대한 수용 및 선호를 반영한다(Pratto et al., 1994; Sidanius & Pratto, 2001). 두 가지 사회적 신념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체제정당화 기억 간에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해당 두 변수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우익권위주의는 Zakrisson(2005)이 개발하고, 박주화 등(2020) 연구에서 변안 및 선별한 단축판 척도 8개 문항

으로 측정하였고(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 8개 문항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4$). 사회지배경향성은 Ho 등(2015)이 개발하고, 박주화 등(2021) 연구에서 변안 및 선별한 단축판 척도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 8개 문항 평균값을 이용해 분석하였다(Cronbach's $\alpha = .76$). 질문지 마지막에 참가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조사하는 문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이 변수들은 모든 분석에서 통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기록한 기억 내용의 개수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분석에서 참가자 별 기억 내용의 개수를 통제하였다.

분석절차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Process macro v.4.2(Hayes, 2017)를 활용하였다. 먼저,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조사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치성향이 체제개선 정책 지지 및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경로를 과거 재난 사건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매개한다는 매개 모형을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조사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변수의 왜도 절대값이 3을 초

과하지 않고, 첨도 절대값이 8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1).

상관분석 결과, 정치성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가설 1과 일관되게 정치성향은 체제개선 정책 지지, 체제개선 행동의도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은 체제개선 정책 지지, 체제개선 행동의도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통제변수인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은 예상대로 체제정당화 기억과 각각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종속변수인 체제개선 정책 지지, 체제개선 행동의도와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가설검증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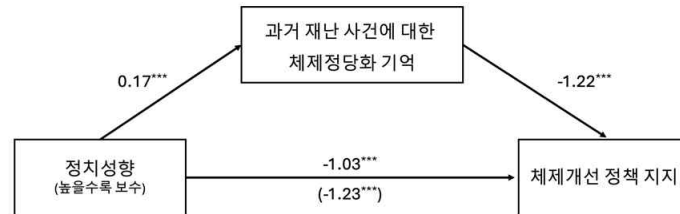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정치성향이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개로 체제개선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가설을 검증하였다(5,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 인구통계변수들을 통제한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정치성향이 체제정당화 기억을 예측하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 = 0.17$, 95% CI [0.10, 0.24]). 또한 정치성향이 체제개선 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직접경로 역시 부적으로 유의했다($B = -1.03$, 95% CI [-1.28, -0.77]). 또한 체제정당화 기억은 체제개선 정책 지지를 부

표 2. 조사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및 변수 간 상관

변수명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03	-.04	-.02	-.07	-.08	-.15*	-.07	.07	-.17*
2. 연령		-	.04	.12	.20**	-.21**	.01	.03	.11	.12
3. 학력			-	.09	-.14	-.05	-.16*	-.07	.14	.07
4. 사회경제적 지위				-	.07	.07	.13	.18*	-.09	.05
5. 우익권위주의					-	.34***	.48***	.27***	-.27***	-.20**
6. 사회지배경향성						-	.43***	.19**	-.38***	-.27***
7. 정치성향							-	.45***	-.68***	-.50***
8. 체제정당화 기억								-	-.51***	-.35***
9. 체제개선 정책 지지									-	.66***
10. 체제개선 행동의도										-
평균	-	44.32	2.77	5.07	4.10	3.13	4.14	0.28	4.78	3.50
표준편차	-	13.79	0.83	1.76	1.12	0.89	0.96	0.40	1.80	1.74
왜도	-	0.07	-0.77	-0.27	-0.01	-0.28	0.03	0.93	-0.49	0.18
첨도	-	-1.23	0.21	-0.33	-0.30	0.42	0.06	-0.85	-0.79	-0.88

주. 정치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함.

$N = 200$. * $p < .05$. ** $p < .01$. *** $p < .001$.



주.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괄호 안의 통계치는 총효과를 나타낸다.

*** $p < .001$

그림 2.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적으로 예측하였다($B = -1.22$, 95% CI [-1.76, -0.69]). 본 연구에서 가정한 매개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설 2와 일관되게 정치성향이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개로 체제개선 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했다($B = -0.21$, 95% CI [-0.34, -0.10]). 이러한 결과는 우익권 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성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도 일관되게 나타났다($B = -0.21$, 95% CI [-0.34, -0.10]).

표 3.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정책 지지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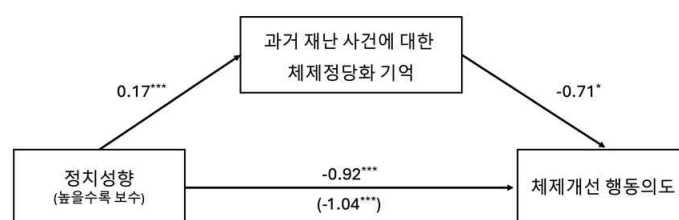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i>B</i>	<i>SE</i>	β	<i>p</i>	<i>LLCI</i>	<i>ULCI</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0.17	.03	.41	< .001	0.10	0.24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정책 지지	-1.22	.27	-.27	< .001	-1.76	-0.69
정치성향 → 체제개선 정책 지지	-1.03	.13	-.55	< .001	-1.28	-0.77
간접효과 검증						
경로	<i>B</i>	<i>BootSE</i>	<i>BootLLCI</i>	<i>BootULCI</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정책 지지	-0.21	.06	-0.34	-0.10		

주. 정치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함. *LLCI*: 95% 신뢰구간 하한계; *ULCI*: 95% 신뢰구간 상한계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정치성향이 과거 재난에 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통해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매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절차로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5,000 bootstrap resamples, 95% 신뢰구간).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정치성향이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직접경로가 부

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0.92$, 95% CI [-1.21, -0.63]), 체제정당화 기억이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 역시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 = -0.71$, 95% CI [-1.32, -0.11]). 매개 분석 결과, 정치성향이 체제정당화 기억을 매개로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였다($B = -0.12$, 95% CI [-0.24, -0.02]). 이러한 결과는 우익권위주의와 사회지배경향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B = -0.12$, 95% CI [-0.24, -0.03]).



주. 비표준화 계수가 제시되었다. 괄호 안의 통계치는 총효과를 나타낸다.

* $p < .05$, *** $p < .001$

그림 3.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표 4.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매개효과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경로	<i>B</i>	<i>SE</i>	β	<i>p</i>	<i>LLCI</i>	<i>ULCI</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0.17	.03	.41	< .001	0.10	0.24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행동의도	-0.71	.31	-.16	.021	-1.32	-0.11
정치성향 → 체제개선 행동의도	-0.92	.15	-.51	< .001	-1.21	-0.63
간접효과 검증						
경로	<i>B</i>	<i>BootSE</i>	<i>BootLLCI</i>	<i>BootULCI</i>		
정치성향 → 체제정당화 기억 → 체제개선 행동의도	-0.12	.06	-0.24	-0.02		

주. 정치성향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임을 의미함. *LLCI*: 95% 신뢰구간 하한계; *ULCI*: 95% 신뢰구간 상한계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체제개선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체제정당화의 관점에서 조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 사이를 매개하는 기억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이 이후 반복된 유사 사건 맥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과거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체제정당화 기억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이러한 체제정당화 기억이 이후 발생한 사회적 재난 사건 맥락에서 낮은 체제개선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억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해당 기억을 많이 보유할수록 최근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체제개선 정책 지지와 체제개선 행동의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 사건의 맥락에서 사회구성원의 정치성향과 집단기억, 그리고 체제개선 행동의도의 관계를 조명한 최초의 연구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심리학에서 정치성향 구성과 형성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정치성향이 강화되고 영속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는 체제정당화 기억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억이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가 영속화되는 과정에 작용하는 중요한 기제임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사건에 관한 기억은 보수적 정치성향에 따른 체제정당화 동기와 결합하여 편향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발생한 유사 사건과 관련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향의 행동의도를 조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동기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개인의 신념과 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특정 사건에 관한 집단기억의

구성 요소를 규명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구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선행 연구(Ionescu et al., 2021)에서도 집단기억을 매개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특정 과거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정서적, 도덕적, 중심성 평가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다소 편의적으로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 방식으로 얻는 자료는 사전에 연구자가 설정한 단면에 관한 참가자의 평가에 한정되므로, 특정 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개개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유한 기억을 관찰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특정 사회적 사건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기억을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이 실제 보유한 기억 내용을 수집하였다.

유사 사회적 재난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이전에 발생한 재난의 원인을 철저히 학습하고, 체제가 지닌 결함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양기근, 2004; 이재열, 2022).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재난 맥락에서 체제정당화 기억의 역할을 조명한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과거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 사건에 관한 기억 내용이 이후 유사 사건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난 이후 근본적인 체제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체제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시민들의 체제개선 요구가 발현되기 위해 사회적 재난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재난이 근본적인 체

제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재난으로 드러난 체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사회가 기억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흔히 한국인들은 과거의 재난이나 불행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일종의 경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과거 사회적 사건에 관한 기억 내용이 달라지며, 이러한 기억이 이후 사건과 관련한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서로 다른 기억이 시민 간 갈등을 재생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024)에 대한 여론 갈등이 대표적이다(이아미, 이영근, 2024). 이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의 차이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며 이를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연구로서 변수들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실험이나 종단 연구를 통해 인과성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체제정당화 동기와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개인차 변수인 정치성향을 예측변수로 사용했지만, 이러한 개인차 이외에도 개인에게 불확실성과 위협을 주는 상황들 역시 사람들에게 체제정당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Jost & Hunyady, 2005). 따라서 체제정당화를 유발하는 상황 조작을 통해 집단기억 내용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과거 및 최근 사회적 재난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우연히 모두 보수정권 하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가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이 동일시하는 정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 Tajfel et al., 1971)에 따른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예: 안혜정 등, 2013). 따라서 진보정권 하에 발생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보수적 정치성향과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에 부적 관계가 관찰되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보수정권 하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체제정당화와 내집단 편애가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집단 편애는 집단 간 맥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우월하게 인식하려는 동기를 반영한다면(Tajfel et al., 1971), 체제정당화는 집단 간 맥락과는 별개로 삶의 불확실성과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Jost et al., 2003; Jost et al., 2007). 따라서, 체제가 반드시 개인이 선호하는 정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유지되어 온 관습과 제도까지 포괄한다는 점(Jost & van der Toorn, 2012)을 고려한다면, 진보적 정권 하에서도 사회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치적 보수성향과 체제정당화 간에는 여전히 정적 관계가 나타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보수주의자들이 재난 발생 책임과 관련하여 이념적 성향이 반대인 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재난을 야기한 기존 사회의 근본적인 관습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개혁적인 제도를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특정 개인차를 지닌 사람들이 과거 사건에 대해 지닌 편향적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주의, 부호화나 파지 단계에서 체제정당화 동기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체제정당화 동기의 영향을 조명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한 정치성향과 체제정당화 기억, 체제개선 행동의도 간의 관계는 보수성향이 본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항상 체제개선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사회적 재난 맥락에서 체제정당화 동기가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정당화 동기가 재난 사건에 관한 사람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체제개선과 관련된 행동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개념적 연결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혜 (2023. 11. 3.). 이태원 참사, 충분히 아시나요?.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030700001>
- 김창진, 홍성우 (2017). 시민참여 유형에 따른 재난예방활동의 특성 및 정책적 함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3), 141-170.
- 류재성 (2019). 정치이념의 구성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유권자는 왜 자신을 보수 혹은

- 은 진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정보연구, 22(2), 91-120.
- 박상은 (2023). 재난의 사회적 원인과 의미 구성: 10·29 이태원 참사를 사례로. *경제와 사회*, 138, 70-100.
- 박주화, 강혜석, Steven Sloman, Eran Halperin, Babak Hemmatian, Nimrod Nir (2020).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통일연구원.
- 박주화, Eran Halperin, 최훈석, 권영미, 이하연, 서정길 (2021).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통일연구원.
- 안혜정, 이민주, 정태연 (2013). 한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보수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29-552.
- 양기근 (2004). 재난관리의 조직학습 사례 연구: 세계무역센터 붕괴와 대구지하철 화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47-70.
- 윤성이 (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163-182.
- 이아미, 이영근 (2024. 2. 13). 눈물 쏟은 70대, 한쪽선 “왜곡” 한숨…돌로 쪼개진 ‘건국 전쟁’ 후기.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8409>
- 이영희 (2014). 재난 관리, 재난 거버넌스, 재난 시티즌십. *경제와사회*, 104, 56-80.
- 이재열 (2022). 복합적 사회재난의 최전선에 놓인 한국. *아시아 브리프*, 2(45).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장승진 (2020).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주의자: 이념성향, 정책선호, 그리고 가치 정향. *한국정당학회보*, 19(1), 129-156.
- 한덕웅 (2003). 한국사회에서 안전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 35-55.
- 한승주 (2018).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정부학연구*, 24(1), 277-308.
- 한정훈 (2016).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4), 105-126.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0, pp. 47-92).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382-2](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382-2)
- Badaan, V., Jost, J. T., Osborne, D., Sibley, C. G., Ungaretti, J., Etchezahar, E., & Hennes, E. P. (2018). Social protest and its discontents: A system justification perspective. *Contention*, 1(1), 1-22.
<https://doi.org/10.3167/cont.2018.060102>
- Bobowik, M., Páez, D., Liu, J. H., Licata, L., Klein, O., & Basabe, N. (2014). Victorious justifications and criticism of defeated: Involvement of nations in world wars, social development, cultural values, social representations of war, and willingness to figh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3, 60-73.
<https://doi.org/10.1016/j.ijintrel.2014.08.013>
- Choi, S. Y., Liu, J. H., Mari, S., & Garber, I. E. (2023). Content analysis of living historical memory around the world: Terrorization of the Anglosphere, and national foundations of hope in developing societies. *Memory Studies*, 16(2), 333-351.

- <https://doi.org/10.1177/1750698021995974>
 Everett, J. A. (2013). The 12 item social and economic conservatism scale (SECS). *PLoS One*, 8(12), e82131.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82131>
- Feygina, I., Jost, J. T., & Goldsmith, R. E. (2010). System justification, the denial of global warming, and the possibility of "system-sanctioned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3), 326-338.
<https://doi.org/10.1177/0146167209351435>
- Ghilani, D., Luminet, O., Erb, H. P., Flassbeck, C., Rosoux, V., Tames, I., & Klein, O. (2017). Looking forward to the past: An interdisciplinary discussion on the use of historical analogies and their effects. *Memory Studies*, 10(3), 274-285.
<https://doi.org/10.1177/1750698017701609>
- Halbwachs, M. (1992). *On collective mem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äkkinen, K., & Akrami, N. (2014). Ideology and climate change denia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0, 62-65.
<https://doi.org/10.1016/j.paid.2014.06.030>
- Hennes, E. P., Nam, H. H., Stern, C., & Jost, J. T. (2012). Not all ideologies are created equal: Epistemic, existential, and relational needs predict system-justifying attitudes. *Social Cognition*, 30(6), 669-688.
<https://doi.org/10.1521/soco.2012.30.6.669>
- Hennes, E. P., Ruisch, B. C., Feygina, I., Monteiro, C. A., & Jost, J. T. (2016). Motivated recall in the service of the economic system: The case of anthropogenic climat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6(6), 755-771.
<https://doi.org/10.1037/xge0000148>
- Hennessey, E., Feinberg, M., & Wilson, A. E. (2021). How political partisanship can shape memories and perceptions of identical protest events. *PLoS One*, 16(11), e025941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59416>
- Hilton, D. J., & Liu, J. H. (2017). History as the narrative of a people: From function to structure and content. *Memory Studies*, 10(3), 297-309.
<https://doi.org/10.1177/1750698017701612>
- Hirst, W., & Manier, D. (1996). Remembering as communication: A family recounts its past. In D. Rubin (Ed.), *Remembering our past: Studies in Autobiographical Memory* (pp. 271-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527913.011>
- Hirst, W., Yamashiro, J. K., & Coman, A. (2018). Collective memory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22(5), 438-451.
<https://doi.org/10.1016/j.tics.2018.02.010>
- Ho, A. K., Sidanius, J., Kteily, N., Sheehy-Skeffington, J., Pratto, F., Henkel, K. E., Foels, R., & Stewart, A. 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7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https://doi.org/10.1037/pspi0000033>

- Hood, C. (2002). The risk game and the blame game. *Government and Opposition*, 37(1), 15-37.
<https://doi.org/10.1111/1477-7053.00085>
- Huber, J. D. (1989). Values and partisanship in left right orientations: Measuring ideolog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17(5), 599-621.
<https://doi.org/10.1111/j.1475-6765.1989.tb00209.x>
- Ionescu, O., Tavani, J. L., & Collange, J. (2021). Perceived societal anomie, collective memory, and support for collective action: Perceiving that current French society is anomic influences present support for collective action through the reconstructed national past.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3), 405-420.
<https://doi.org/10.1111/ajsp.12438>
- Jeong, H. Y., & Ray Vollhardt, J. (2021). Different collective memories of Japanese colonization in Korea: Consequences for distinct preferences for strategies to deal with the past.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3), 392-404.
<https://doi.org/10.1111/ajsp.12449>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1), 1-27.
<https://doi.org/10.1111/j.2044-8309.1994.tb01008.x>
- Jost, J. T., Becker, J., Osborne, D., & Badaan, V. (2017). Missing in (collective) action: Ideology,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motivational antecedents of two types of protest behavior.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6(2), 99-108.
<https://doi.org/10.1177/0963721417690633>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https://doi.org/10.1037/0033-2909.129.3.339>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https://doi.org/10.1111/j.0963-7214.2005.00377.x>
- Jost, J. T., Napier, J. L., Thorisdottir, H., Gosling, S. D., Palfai, T. P., & Ostafin, B. (2007). Are needs to manage uncertainty and threat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servatism or ideological extrem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7), 989-1007.
<https://doi.org/10.1177/0146167207301028>
-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3), 209-232.
<https://doi.org/10.1006/jesp.1999.1403>
- Jost, J. T., & van der Toorn, J. (2012). System justification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313-343). Sage Publications Ltd.
<https://doi.org/10.4135/978144624922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 Press.
-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498.
<https://doi.org/10.1037/0033-2909.108.3.480>
- Li, M., Lin, H., & Maer, M. N. D. (2021). Relationship of living historical memories and news source with national identity: A latent class analysi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3), 364-377.
<https://doi.org/10.1111/ajsp.12441>
- Lim, T., & Leong, C. H. (2021). Whose narratives? Divergence in how history is organised across generations and its impact on well being.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3), 349-363.
<https://doi.org/10.1111/ajsp.12451>
- Liu, J. H., Choi, S. Y., Zhang, R. J., Vilar, R., & Hakim, M. A. (2022). Social representations of history, living historical memory, and historical charters: Refining collective memory toward a theory of political culture change. In H. L. Roediger III, and J. V. Wertsch (Eds.), *National memories: Constructing identity in populist times* (pp. 169-189). Oxford Academic.
<https://doi.org/10.1093/oso/9780197568675.003.0009>
- Liu, J. H., & Hilton, D. J. (2005). How the past weighs on the present: Social representations of history and their role in identity politic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4), 537-556.
<https://doi.org/10.1348/014466605X27162>
- Muller, F., Bermejo, F., & Hirst, W. (2016). Argentines' collective memories of the military Junta of 1976: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cross generations and ideology. *Memory*, 24(7), 990-1006.
<https://doi.org/10.1080/09658211.2015.1061013>
- Muller, F., Bermejo, F., & Hirst, W. (2018). Cultural and communicative memories: Contrasting Argentina's 1976 coup d'état and the 2001 economic-political-social crisis. *Memory*, 24(7), 974-984.
<https://doi.org/10.1080/09658211.2018.1431283>
- Napier, J. L., Mandisodza, A. N., Andersen, S. M., & Jost, J. T. (2006). System justification in responding to the poor and displaced in the aftermath of Hurricane Katrina.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4(1), 57-73.
<https://doi.org/10.1111/j.1530-2415.2006.00102.x>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https://doi.org/10.1037/0022-3514.67.4.741>
- Proudfoot, D., Kay, A. C., & Mann, H. (2015). Motivated employee blindnes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ability on judgment of organizational inefficiencie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30, 108-122.
<https://doi.org/10.1016/j.obhdp.2015.06.008>
- Sahdra, B., & Ross, M. (2007). Group identification and historical memor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3), 384-395.
<https://doi.org/10.1177/0146167206296103>
- Sanitioso, R., Kunda, Z., & Fong, G. T. (1990). Motivated recruitment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59(2), 229-241.
<https://doi.org/10.1037/0022-3514.59.2.229>
- Sidanius, J. (1978). Intolerance of ambiguity and socio-political ideolog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2), 215-235.
<https://doi.org/10.1002/ejsp.2420080207>
- Sidanius, J., & Pratto, F. (2001).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E. R., & Semin, G. R. (2004). Socially situated cognition: Cognition in its social context.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6, pp. 53-17). Elsevier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4\)36002-8](https://doi.org/10.1016/S0065-2601(04)36002-8)
- Tajfel, H., Billig, M. G.,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 149-178.
<https://doi.org/10.1002/ejsp.2420010202>
- Tierney, K. J. (2007).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Disaster research at the crossroads. *Annual Reviews of Sociology*, 33(1), 503-525.
<https://doi.org/10.1146/annurev.soc.33.040406.131743>
- Wilson, G. D., & Patterson, J. R. (1968). A new measure of conservatism. *British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7(4), 264-269.
<https://doi.org/10.1111/j.2044-8260.1968.tb00568.x>
-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5), 863-872.
<https://doi.org/10.1016/j.paid.2005.02.026>

논문 투고일 : 2024. 11. 26
 1 차 심사일 : 2025. 01. 03
 게재 확정일 : 2025. 02. 12

The Mediating Role of System-justifying Memor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Orientation and Intention to Engage in Collective Actions for Improving the Disaster Safety System: Illustrated by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Itaewon Disaster

Minjae Kang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o prevent recurring social disasters, proactive civic engagement demanding fundamental improvements for the disaster safety system is essential. Based on this premise,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s' intention to engage in system-improvement behavior through two studies. Specifically, we investigated whether political orientation affects individual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system-improvement actions aimed at preventing social disasters such as the Itaewon disaster and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system-justifying memory-memories that exonerate or avoid systemic flaws-related to a past social disaster (i.e., the Sewol ferry disaster). In a preliminary study, we collected collective memories associated with the Sewol ferry disaster from a sample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N = 27$). The findings confirmed the presence of system-justifying elements in these collective memories and identified their key components. The main study tested the mediation hypothesis with a sample of South Korean adults ($N = 200$).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dividuals with more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s exhibited lower intentions to engage in system-improvement behaviors aimed at preventing disasters such as the Itaewon disaster. This relationship was mediated by the system-justifying memory associated with the Sewol disast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orientation influences collective memory of social disasters, which in turn plays a crucial role in shaping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action for systemic change.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 the role of collective memory in shaping system-improvement behavior in the context of social disaster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social disasters, political orientation, collective memory, system justification, system-improvement behavioral intentions